김정일 조문 "하자" "안돼" 여야 대립각

원혜영 "국회조문단 구성" 제안

박근혜 "정부도 안하는데" 거절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21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 대한 국회 조문단 파견 문제를 놓고 대립했다.

민주통합당 원혜영 공동대표가 이날 취임 인사차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국회 조문단 문제를 논의했으나 입장차가 확연히 드러난 것이다.

원 공동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정부 차원의 조문단 파견은 하지 않기로 결정됐지만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방안으로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국회차원의 조문단이 논의될 수 있지 않을까(싶다) 많은 의견을 나누고 싶다"며 박 위원장에게 논의를 요청했다. 이어 "김정일 위원장이 급서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주당은 여야가 함께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여야 모두 노력해야 한다. 북한에 대해 많이 공부했고 활동했던 박 비대위원장이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남남갈등, 국론분열이 있어선 안 된다"고 전제한 뒤 "정부가 조문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했고, 이런 문제는 정부의 기본방침과 다르게 가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또 "이미 북에서 조문단을 받지 않는다고 했고, 여야가 각각 당의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조문단을 꾸리는 것은 순리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원 대표는 "정당을 주축으로 하는 국회는 민간과 정부의 중간 입장에서 능동적으로 선도할 수 있지 않으냐", "아침 뉴스에서 한국과 중국의 조문단은 받겠다는 것을 봤다"며 여야 간 협의를 요구했다.

박 위원장도 "여야가 정치 복원을 위해 협의는 필요하지만, 정부의 기본 방침을 따르는 게 중요하다"고 불가론을 고수했다.

원 대표는 박 위원장이 2002년 북한 초청으로 김 위원장을 만난 사실을 거론한 뒤 "박 위원장이 당당하게 신뢰를 기반으로 한 대화를 했다. 국회가 정부보다 반걸음 정도 앞서가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박 위원장은 "2002년 그때는 핵문제 등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며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에둘러 표현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과 민주통합당 원혜영 공동대표가 21일 국회 한나라당 대표실에서 만나 인사를 나눈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같은 한나라당의 반응에 대해 민주당은 야당만으로 조문단을 꾸리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시민사회 원로들과의 면담을 통해 그들의 의견을 들은 뒤 단독 조문단 구성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면담에서는 석패율제 도입과 소득세율 인상 문제도 논의됐다.

석패율제 도입에 대해 원 대표가 "지역갈등을 풀고 정치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자 박 위원장은 "국회 정개특위에서 여야가 활발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원 대표는 "복지예산 확보와 재정건전성 문제가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40%로 인상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인상 구간은 전문가와 논의하고 여야가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세제는 굉장히 오래전 만들어진 것이므로 시대에 맞게 손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소득 재분배도 여야가 형평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답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희호 여사·현정은 회장 조문 어떻게

정부 실무진 동행 육로 유력… 北 수용 관심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조문 방북을 위한 실무 협의가 21일 시작됐다. 통일부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 대한 이 여사와 현 회장 측의 조문 방북을 허용한 만큼 이날부터 양측과 방북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민간차원의 조문이지만 조문단 규모와 시기 등에 대해 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면서 "협의 결과를 북측에 통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측에 대한 통보는 전직 대통령의 영부인인 이 여사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개성공단이나 판문점 적십자채널 등 정부 채널이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이 여사와 현 회장에 대한 방북을 허용했지만, 북측의 호응이 있어야 한다. 북측이 이 여사와 현 회장의 조문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만 장담할 수는 없다.

방북이 이뤄지더라도 조문단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고 김 대통령과 고 정 회장의 '유족'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유족, 수행원, 의료진 정도만 허용될 예정이다. 취재진 동행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여사와 현 회장 가족과 최소한의 수행원이 따라붙을 전망이다.

최보선 통일부 대변인은 이 여사의 방북에 박지원 전 민주당 원내대표의 동행이 주목되는 것과 관련해 "정치인은 유족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조문단에는 정무 실무진이 동행한다. 최 대변인은 "정부 실무진을 보내기로 했다"면서 "연락 채널을 유지하는 맥락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방북 경로도 관심거리다. 중국 베이징을 통해 평양으로 들어가거나, 육로, 서해 직항로를 이용할 수 있다. 2009년 8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시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등 북측 조문단은 서해 직항로를 통해 온 전례가 있다. 최 대변인은 "육로나 항공편 등 모두 고려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北, 한미 정부차원 조의에 일단 무반응

이희호·현정은 조의는 소개

북한은 우리정부와 미국정부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에 대해 20일 발표한 조의 표시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 한미 정부의 조의 내용과 사실상 정부와 민간차원의 조문을 불허한 우리 정부의 결정에 불만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조의에는 공통적으로 "북한주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북한은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조문 등 각국 외교대표들의 조문, 조의 표명 소식을 비중 있게 전하고 있다.

남측 인사들의 조의와 관련해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노무현재단, 민주통합당과 기타 야당인사들이 조의를 표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해외조문단을 받지 않을 방침을 밝혔으면서도 노무현재단이 조문단을 파견키로 했다는 소식도 별도로 소개했다. /연합뉴스

환경협약 광주정상회의·F1 성공 개최

광주·전남 글로벌 도시로 성장

올해 광주와 전남에서는 대형 국제행사들이 성공리에 치러졌다. 풍성한 국제행사를 통해 광주와 전남은 '글로벌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특히 전남은 세계 3대 스포츠이벤트인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전남'과 지방 중소도시인 '영암', 나아가 '코리아' 브랜드를 전 세계에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성과를 올렸다.

광주는 올해 세계 속의 환경도시로 우뚝 섰다. 지난 10월11일부터 14일까지 광주에서 열린 '2011 도시환경 협약(UEA) 광주정상회의'를 통해 광주가 지구환경의 미래비전을 제시면서 지난 2005년 첫 회의를 개최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필적할만한 성과를 남겼다는 평가를 받았다. 세계 105개 도시가 광주에서 탄소배출 제한, 에너지·폐기물 연계정책, 녹색도시 정책의 도입 등을 약속했고, 도시환경평가지표 및 도시 청정개발체계(CDM) 등의 개발과 도입을 통해 참여도시들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또한, 오는 2012년 교토의정서의 만료를 앞두고 G20,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등이 이를 대체할 새로운 체계의 구축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정상회의 개최는 시기적으로 적절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특히 인구 145만 변방도시였던 광주가 세계 115개 도시의 정상 및 대표단, 국제기구 고위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국제행사를 성공리에 치러내면서 세계 속의 도시로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남도 세계 최대 모터스포츠 이벤트인 F1 대회를 통해 적지않은 수확을 거뒀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우려가 높았던 상황에서 대규모 국제 행사를 계기로 '돌아오는 전남'을 만들어가는 기반을 확고히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회고 2011

1. 안철수 현상
2. '도가니' 충격
3. 기아차 질주
4. 영욕의 5·18
5. 야권통합
6. 부실대학 퇴출
7. 조선대 총장 선거 파문
8. 무상급식과 복지 재정난
9. 풍성한 국제행사
10. 가거도 방파제 붕괴

지난 10월 14일~16일 사흘간 열린 대회를 보기 위해 찾은 관람객만 16만186명. 특히 3일간 관람객의 90%는 실제 돈을 내고 티켓을 구입한데다,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정부와 일부 지역민들의 반발 여론 속에서 일궈낸 '성과'라는 점에서 적자 논란에도 불구, 전국적인 관심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무엇보다 '수도권이 아니면 안된다'는 식의 패배의식을 깨고 '지방에서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지역민들에게 심어줬다는 데 의미가 크다는 게 대부분의 평가다.

다만, 열악한 재정 형편을 고려하면 정부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면서 매년 수백억원의 적자를 보전할만한 대책을 마련하는 게 대회의 지속 개최를 위한 선결 과제라는 목소리가 높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말된다